



(회관)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, 국회의원회관 735호 T. 02-784-3174 F. 02-6788-6985
(지역)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9번길 10, 선진빌딩 302호 T. 031-875-0410 F. 031-875-0414

배포일 : 2025년 10월 17일 (금)

담당 : 신연석 보좌관

배포일 : 배포즉시 보도요청

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10개 중 4개는 활용 안돼

- 전국 136개 지자체 172개 특구 운영, 전체 기초지자체의 60%
- 2004년 도입 후 228개 지정·56개 해제, 규제특례 중 41% 미활용
- 박지혜 의원 “규제 특례만으론 한계… 세제·재정 지원 등 패키지형 특구로 전환해야”

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, 특구 10개 중 4개는 여전히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(의정부시갑)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, 총 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.

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.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28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으나, 이 중 56개 특구가 해제·통합되어 현재는 172개가 운영되고 있다.

지역별 특구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▲경북 21개

▲경기 19개 ▲충북 16개 ▲충남 16개 ▲전북 13개 ▲경남 13개 ▲강원 13개 ▲서울 10개 ▲부산 6개 ▲대구 5개 ▲광주 3개 ▲울산 3개 ▲인천 2개 ▲제주 2개 ▲대전 1개 순으로 조사됐다.

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,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129개 중 76개(58.9%)만 활용되고, 나머지 53개(41.1%)는 미활용 상태로 확인됐다. 더욱이 활용 중인 특례 역시 관광·체험·농식품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.

신규 규제특례 발굴 추이도 ▲2004년 69개 ▲2006년 97개 ▲2009년 126개 ▲2011년 132개로 증가했으나, 이후 정체되어 ▲2024년 129개로 오히려 감소했다.

박지혜 의원은 “지역특화발전특구는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, 도입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지역 차원의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본래 목표가 약화되고 있다”라며, “세제 및 재정 지원 등 추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 <끝>

[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목적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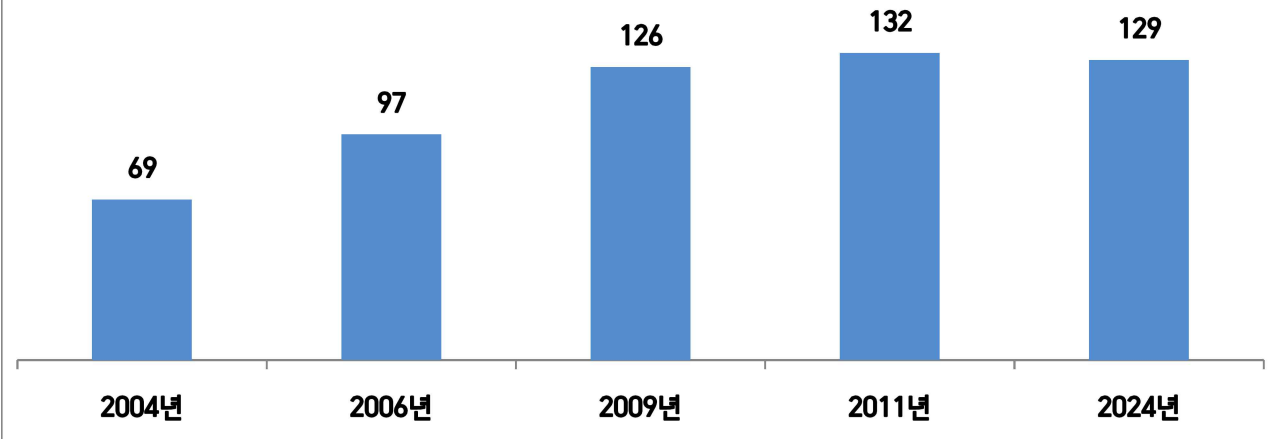
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'특화특구')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일정 규모의 구역을 지정하여 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다. 동 제도는 지역 특화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「지역특구법」을 근거법률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

[지역별 특구 현황]
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합계
10	6	5	2	3	1	3	19	13	16	16	13	29	21	13	2	172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[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규제특례 발굴 추이]



단위: 개

출처: 중소벤처기업연구원 / 박지혜의원실 재구성